

이슈페이퍼 2018-04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고찰

최효미

1. 배경 및 문제점
2. 지원 정책과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인식
3. 서비스 이용 행태별 인식 차이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고찰*

최효미 부연구위원

| 요약 |

- 영유아 가구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무상보육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낮은 동의도를 보였음. 반면,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도는 매우 높게 나타남.
- 영유아 가구들 사이에 조기 교육에 대한 요구는 전반적으로는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조기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부모일수록 사교육 등의 이용 비중이 높고,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도 높은 특징이 포착됨.
- 주어진 재원 안에서 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비용 지원 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추가적인 증세가 아닌 재정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유아교육·보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시급히 요구됨.
- 또한,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비용 지원 중심의 보육 지원을 넘어선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강화가 요구됨.
- 한편, 영유아기 부모들의 조기 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초등기 이후 교육 과정에 대한 불안감이 투영된 것일 수 있으므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특히 영유아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의 강화와 정책 홍보가 요구됨.

1 배경 및 문제점

- 정부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전면적인 무상 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여전히 높음

* 본 원고는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된 자료를 재분석하여 구성함.

로 나타남(권미경 외, 2016: 120~123).

- 비용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경감 효과도 그리 크지 않아, 2016년 아동 당 총 교육·보육비용은 월평균 16만9천원(최효미 외, 2016 : 103)이었으며, 2017년 19만8천원(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85)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7년 기준 영유아 가구 중 복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47.0%로 절반가량에 달하며, 특히 기관 교육·보육(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사교육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83).
 - 즉, 정부가 상당 부분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기관(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등)을 이용한 이후에도, 영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사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선택 및 이용비용에는 서비스 이용종류 및 조합 방식 뿐 아니라 다양한 가구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침.
- 선행 연구 등에 따르면,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에는 자녀수, 지역 규모, 가구소득, 가구원 수, 모 특성(연령, 교육수준), 맞벌이 여부, 자녀 연령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¹⁾.
 - 이와 함께 정책적 지원의 확대도 교육·보육 이용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침(김은정·이혜숙, 2016; 최효미 외, 2016).
 -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것이므로, 실제 이용하고 싶었으나 현재 이용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경우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가구 특성이나 자녀 특성 뿐 아니라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의 인식이 교육·보육서비스 선택과 이용비용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춤.

1) 김지경(2005), 박선욱(2008), 박선욱(2011), 이성림(2011),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최효미 외(2016) 등.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의 다수가 가구 특성, 모 특성, 자녀 특성 등에 따라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및 이용비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반면, 교육·보육서비스 선택 및 이용비용 결정에 있어 영유아 가구의 정책에 대한 인식 및 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진행된 바가 없음.
- 가치관과 인식에 대한 고찰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영유아 가구가 보다 근본적으로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찰의 필요성이 높음.

2 지원 정책 및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인식

- 2장 이후의 내용은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
-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치관 및 인식 문항의 경우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3개 문항),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견해(2개 문항),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4개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봄.
 - 출산 관련 2개 문항, 현재 세태에 대한 인식 2문항은 직접적 연관성이 낮으므로 제외함.
 -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는 고소득자에 대한 무상 보육 필요성, 재정 부담 대비 지원 확대 당위성, 증세에 대한 태도 등임.
 - 일·가정 양립에 대한 태도는 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의 원인이 부실하고 부족한 보육서비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유연근무 등 부모권 보장이 안 되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함.
 -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가치관 문항은 기관 이용에 대한 선호 및 효과성에 대한 입장, 취학 전 학습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됨.

가. 가구 특성별 무상 보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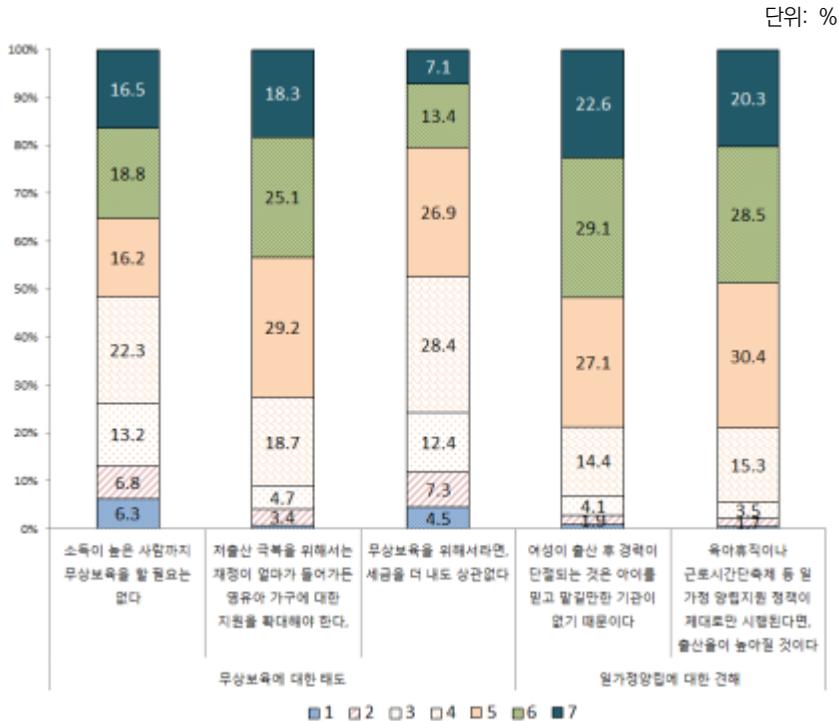
- 무상보육과 관련된 인식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질문에 7점 만점에 5.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임.
 - 반면, ‘무상보육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는 질문에는 4.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임.
 -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 할 필요는 없다’는 질문에도 4.6점으로 비교적 낮은 동의를 보임.



[그림 1] 무상 보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태도(평균)

-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인식 문항에 대한 동의도는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질문과 ‘여성이 출산 후 경력에 단절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는 질문에 둘 다 5.4점으로 나타남.

- 무상보육과 관련된 인식과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인식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2개 질문은 7점 응답 비중이 각각 22.6%와 20.3%로 높게 나타남.
- 한편, 5점 이상 응답 비중도 평균 점수에서의 경향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특히 무상보육을 위한 증세 의사에 대해서는 7점에 응답한 비중이 7.1%로 매우 낮았으나, 6점 정도 동의한다는 응답은 13.4%, 5점 정도의 동의를 보이는 경우는 26.9%로, 전반적으로 낮은 동의를 보이기는 하지만 7점 동의도가 낮은 것에 기인한 현상임.



주 : 7점 만점이며, 비중이 1% 미만인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음.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무상 보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태도(비중)

-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는 총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막내자녀 연령별 태도는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은 막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도가 낮아지는데, 자신이 향후 정책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동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부모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이 다소 주관적 편향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표 11 | 총 자녀수 및 (막내)자녀의 연령별 인식

단위: 7점 척도, 명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			일·가정양립에 대한 견해		빈도
	①	②	③	④	⑤	
전체	4.6	5.2	4.3	5.4	5.4	(1,119)
총 자녀수						
1명	4.5	5.3	4.3	5.4	5.5	(350)
2명	4.7	5.2	4.2	5.4	5.4	(603)
3명이상	4.5	5.2	4.4	5.4	5.3	(166)
<i>F</i>	2.8	0.2	0.8	0.0	0.7	
막내자녀연령별						
0세	4.4	5.5	4.4	5.4	5.4	(230)
1세	4.5	5.3	4.2	5.4	5.4	(192)
2세	4.6	5.3	4.3	5.6	5.5	(176)
3세	4.8	5.2	4.1	5.3	5.3	(171)
4세	4.7	5.0	4.3	5.3	5.3	(169)
5세	4.6	5.0	4.4	5.5	5.4	(182)
<i>F</i>	1.4	3.3**	1.5	1.2	1.0	

주 : ①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③무상보육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 ④여성이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⑤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제 등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 $p < .05$, ** $p < .01$, *** $p < .001$

- 맞벌이 여부 및 가구소득, 지역규모별로도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와 일·가정양립에 대한 견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다만, ‘무상 보육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지역 규모에 따라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동의가 높음.

표 21 맞벌이 여부 및 가구소득, 지역규모별 인식

단위: 7점 척도, 명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			일·가정양립에 대한 견해		빈도
	①	②	③	④	⑤	
전체	4.6	5.2	4.3	5.4	5.4	(1,119)
맞벌이 여부						
그렇다	4.6	5.2	4.3	5.4	5.4	(518)
아니다	4.6	5.2	4.3	5.4	5.4	(601)
t	0.7	-0.3	0.8	0.2	0.7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5.4	5.1	4.0	5.3	5.3	(19)
200~299만원	4.7	5.2	3.9	5.4	5.4	(120)
300~399만원	4.6	5.1	4.1	5.2	5.2	(350)
400~499만원	4.7	5.4	4.4	5.5	5.6	(263)
500~599만원	4.5	5.2	4.4	5.4	5.4	(195)
600~699만원	4.5	5.4	4.5	5.5	5.5	(75)
700만원이상	4.4	5.3	4.7	5.7	5.4	(98)
F	1.0	1.2	4.5***	2.5*	2.1	
지역 규모						
대도시	4.7	5.2	4.5	5.3	5.3	(479)
중소도시	4.5	5.2	4.1	5.4	5.4	(509)
읍면지역	4.3	5.3	4.1	5.5	5.5	(131)
F	2.9	0.2	10.6***	2.0	2.2	

주 : ①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③무상보육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 ④여성이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⑤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제 등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 $p < .05$, ** $p < .01$, *** $p < .001$

나. 가구 특성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문항의 경우 7점 만점에 평균 4점대로 그다지 높은 동의도를 보이지 않은 특징이 있음(그림 3참조).
 - 가치관 문항 중 동의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한다’로 평균 4.9점임.
 - ‘취학전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는 질문에는 평균 4.5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는 질문에는 평균 4.3점의 동의를 보임.
 - ‘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는 질문에는 평균 3.9점으로 보통 이하의 낮은 동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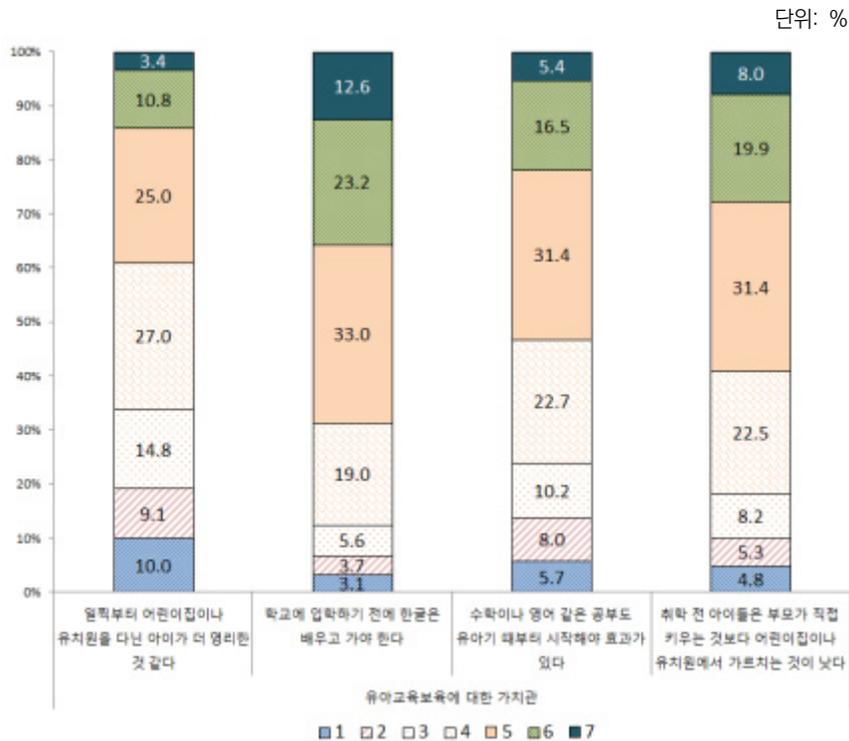


[그림 3]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평균)

-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문항에 대한 응답 빈도를 살펴보면, 입학 전 한글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5점을 준 경우가 33.0%, 6점 23.2%, 7점 12.6%로, 상당수 부모들이 취학 전 한글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함.
 - 반대로 ‘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는 질문에

는 5점 이상에 응답한 비중이 39.2%였으며, 최하점인 1점에도 10.0%가 응답하여 낮은 동의를 보임.

- 하지만, 교육적 효과와 무관하게 가정내 보육보다 기관 보육에 대한 선호를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는 5점 이상에 59.3%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기 기관 이용이 교육적 목적 때문만이 아님을 짐작케 함.
- 한편, 취학전 한글 교육이 아닌 수학이나 영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견해는 5점 이상 53.3%, 3점 이하 23.9%로 한글 교육에 비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음.



주 : 7점 만점 기준이며, 비중이 1% 미만인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음.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비중)

-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문항은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동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조기 기관 이용에 대한 긍정적 생각, 유아기 수학이나 영어 공부의 효과성, 취학 전 기관 이용에 대한 선호 등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동의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 취학 전 한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해 다자녀인 경우 높은 동의를 보이기는 하나, 자녀가 3명인 경우에 비해 2명인 경우에 약간 더 높은 동의를 보임.
 -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1 표 31 총 자녀수 및 (막내)자녀의 연령별 가치관 차이

단위: 7점 척도, 명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빈도
	⑥	⑦	⑧	⑨	
전체	3.9	4.9	4.3	4.5	(1,119)
총 자녀수					
1명	3.7	4.7	4.0	4.3	(350)
2명	3.9	5.0	4.3	4.6	(603)
3명이상	4.1	4.9	4.4	4.7	(166)
<i>F</i>	5.4**	4.1*	4.7**	6.4**	
막내자녀연령별					
0세	3.9	4.8	4.3	4.4	(230)
1세	3.8	4.9	4.2	4.5	(192)
2세	4.0	4.9	4.4	4.6	(176)
3세	3.9	5.0	4.2	4.4	(171)
4세	3.9	4.7	4.2	4.6	(169)
5세	3.8	5.0	4.2	4.6	(182)
<i>F</i>	0.6	1.2	0.7	0.8	

주 : ⑥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 ⑦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 한다, ⑧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⑨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

* $p < .05$, ** $p < .01$, *** $p < .001$

- 맞벌이 여부 및 가구소득, 지역규모 등에 따라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다만, 취학 전 부모의 직접 양육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동의를 보이는 특징이 있음.
 - 즉,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그 이하 소득 구간 가구에 비해 부모 양육 대비 기관 양육에 대한 선호가 약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 | 맞벌이 여부 및 가구소득, 지역규모별 인식

단위: 7점 척도, 명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빈도
	⑥	⑦	⑧	⑨	
전체	3.9	4.9	4.3	4.5	(1,119)
맞벌이 여부					
그렇다	3.9	4.9	4.2	4.5	(518)
아니다	3.9	4.9	4.3	4.6	(601)
t	-0.1	-0.4	-1.1	-0.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7	4.7	4.2	4.6	(19)
200~299만원	3.8	4.9	4.1	4.5	(120)
300~399만원	4.0	4.9	4.3	4.6	(350)
400~499만원	3.9	4.8	4.2	4.6	(263)
500~599만원	4.0	4.9	4.4	4.5	(195)
600~699만원	3.6	4.9	4.4	4.2	(75)
700만원이상	3.8	4.7	4.0	4.1	(98)
F	0.9	0.5	1.1	2.9**	
지역 규모					
대도시	4.0	4.9	4.3	4.4	(479)
중소도시	3.8	4.8	4.2	4.6	(509)
읍면지역	3.8	5.0	4.2	4.6	(131)
F	2.5	1.2	0.7	1.3	

주 : ⑥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 ⑦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 한다, ⑧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⑨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

* $p < .05$, ** $p < .01$, *** $p < .001$

다. 정책에 대한 인식-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 정책에 대한 인식과 유아교육·보육 가치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무상 보육에 대한 인식 문항 중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는 문항은 다른 유아교육·보육 가치관 문항과 유의한 상관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 즉, 기관 보육의 필요성 및 효과성, 취학 전 학습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견해와 무관하게 무상 보육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영유아 가구가 가구소득과 무관한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유아교육·보육 가치관 문항 중에서는 ‘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는 문항의 경우 ‘무상 보육을 위한 증세 동의’가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책 선호와의 상관이 낮은 문항이었음.
 - 무상 보육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동의도가 높은 사람들은 조기 기관 이용의 효과성에 대해 더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유아기 수학이나 영어에 대한 조기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임.
 - 즉, 영유아기 기관 이용과 조기 학습에 대한 동의가 높을수록 증세를 통해서라도 무상 보육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여성 경력단절이 신뢰할만한 보육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에 동의도가 높은 경우에는 취학전 한글 학습의 필요성, 유아기 수학 및 영어 조기 학습의 효과성, 기관 보육 선호 등에서 양의 상관을 보임.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동의가 높을수록 취학전 한글 학습의 필요성, 기관 보육 선호 등에서 양의 상관을 보임.

| 표 5 | 정책에 대한 인식-유아교육·보육 가치관 간의 상관관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⑥	⑦	⑧	⑨			
무상보육에 대한 인식	①	-0.0524	-0.0319	-0.0422	-0.0249			
	②	0.0228	0.0873	***	0.0382	0.0384		
	③	0.1651	***	-0.0193	0.1085	***	-0.0079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④	0.0264	0.0962	***	0.0684	**	0.1057	***
	⑤	-0.0505	0.0962	***	0.0308		0.1042	***

주 : 1) ①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③무상보육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 ④여성이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⑤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제 등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⑥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 ⑦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 한다, ⑧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⑨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

2) 영유아별로 매칭한 자료임.

* $p < .05$, ** $p < .01$, *** $p < .001$

3 서비스 이용 행태별 인식 차이

가. 서비스 이용 행태별 무상 보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태도

- 서비스 조합 방식별로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한 문항이었음.
 - ‘지원 확대 필요성’은 역설적이게도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사교육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사교육서비스+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높은 동의도를 보임.
 - 즉,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적용되는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사교육서비스+개별돌봄서비스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서비스 조합방식을 가진 경우와 인식에 있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거나, 관측치가 2개에 불과하므로, 과도한 해석은 주의를 요함.

-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은 동의도를 보였으며,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 무상 보육을 위한 증세,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높은 동의도를 보였음.

▶ 표 6 | 이용 서비스별 무상보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

단위: 7점 척도, 명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			일·가정양립에 대한 견해		빈도
	①	②	③	④	⑤	
전체	4.6	5.2	4.3	5.4	5.4	(1,119)
전적으로 부모가 돌봄	4.4	5.4	4.6	5.4	5.4	(171)
단일서비스						
어린이집만 이용	4.6	5.3	4.2	5.3	5.3	(358)
유치원만 이용	4.8	5.3	4.3	5.3	5.3	(196)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	4.9	4.7	4.3	5.5	5.2	(43)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	4.2	5.7	4.3	5.6	5.7	(22)
사교육서비스만 이용	3.9	5.8	4.6	6.1	5.7	(13)
복수서비스 이용						
기관 + 사교육서비스	4.7	5.1	4.3	5.4	5.4	(547)
기관 + 개별돌봄서비스	4.4	5.3	4.1	5.5	5.5	(74)
사교육서비스+개별돌봄서비스	3.2	5.8	5.5	6.2	6.3	(2)
기관+사교육+개별돌봄	4.4	5.1	4.4	5.8	5.4	(79)
F	0.69	2.16*	1.12	1.58	0.43	

주 : ①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③무상보육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 ④여성이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⑤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제 등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 $p < .05$, ** $p < .01$, *** $p < .001$

- 서비스 이용비용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서비스 이용비용이 30~50만원 사이인 경우에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무상 보육을 위한 증세 의사,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에서 약간 높은 동의를 보임.

- 반대로 서비스 이용비용이 5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를 보임

표 71 서비스 이용비용별 무상보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

단위: 7점 척도, 명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			일·가정양립에 대한 견해		빈도
	①	②	③	④	⑤	
전체	4.6	5.2	4.3	5.4	5.4	(1,119)
서비스 이용비용						
10만원 미만	4.6	5.3	4.3	5.4	5.3	(529)
10~30만원 미만	4.6	5.3	4.4	5.4	5.4	(479)
30~50만원 미만	4.7	5.3	4.5	5.5	5.6	(195)
50만원 이상	4.6	5.1	4.2	5.5	5.4	(302)
F	0.14	1.95	0.86	1.47	0.95	

주 : ①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③무상보육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 ④여성이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⑤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제 등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 $p < .05$, ** $p < .01$, *** $p < .001$

나. 서비스 이용 행태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 이용 서비스 조합방식별에 따라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은 조기 한글 교육의 필요성과 조기 수학 혹은 영어 학습의 효과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하거나 개별돌봄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기관+사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조기 한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도가 높게 나타남.

표 81 이용 서비스 조합방식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단위: 7점 척도, 명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빈도
	⑥	⑦	⑧	⑨	
전체	3.9	4.9	4.3	4.5	(1,119)
전적으로 부모가 돌봄	3.7	4.7	4.3	4.4	(171)
단일서비스					
어린이집만 이용	3.9	4.9	4.2	4.6	(358)
유치원만 이용	3.7	4.9	4.2	4.7	(196)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	4.2	5.2	5.0	4.7	(43)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	4.1	5.1	3.8	4.9	(22)
사교육서비스만 이용	3.6	4.4	3.1	3.4	(13)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빈도
	⑥	⑦	⑧	⑨	
복수서비스 이용					
기관 + 사교육서비스	4.0	5.1	4.4	4.5	(547)
기관 + 개별돌봄서비스	3.8	4.7	4.4	4.6	(74)
사교육서비스+개별돌봄서비스	4.8	4.8	5.8	4.8	(2)
기관+사교육+개별돌봄	4.2	4.9	4.3	4.5	(79)
F	1.21	2.01*	2.33*	1.87	

주 : 1) ⑥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 ⑦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 한다, ⑧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⑨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

2) 영유아별로 매칭한 자료임.

* $p < .05$, ** $p < .01$, *** $p < .001$

- 서비스 이용비용에 따라서는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비용이 10만원이하인 경우 4.1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동의도를 보임.
 -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낮은 동의도를 보임.
 - 조기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동의도가 낮은 경우 현재 이용비용도 낮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음.
 - ‘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는 질문에는 서비스 이용비용이 30~50만원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표 9 | 서비스 이용 비용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단위: 7점 척도, 명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빈도
	⑥	⑦	⑧	⑨	
전체	3.9	4.9	4.3	4.5	(1,119)
서비스 이용비용					
10만원 미만	3.8	4.7	4.1	4.5	(358)
10~30만원 미만	3.8	4.9	4.4	4.5	(196)
30~50만원 미만	4.2	5.1	4.4	4.6	(43)
50만원 이상	4.0	5.0	4.4	4.6	(22)
F	2.03	3.46*	8.53***	1.60	

주 : 1) ⑥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 ⑦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 한다, ⑧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⑨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

2) 서비스 이용 비용은 가구당 총 교육·보육 비용임.

* $p < .05$, ** $p < .01$, *** $p < .001$

4 결론 및 시사점

- 영유아 가구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무상보육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낮은 동의도를 보였음.
 - 한편,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이나, 신뢰성 있는 기관 보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무상 보육보다 더 높은 동의도를 보였음.
 - 이와 같은 경향성은 가구특성이나 자녀 특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영유아 가구 전반에서 나타나는 양상임을 알 수 있었음.
- 유아교육·보육 가치관과 관련된 문항들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동의도를 보인 가운데,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한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도가 그나마 높은 수준이었음.
 - 조기 영어교육 혹은 수학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평균 4.3점, 조기 기관 보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평균 3.9점의 낮은 동의를 보였음.

- 자녀가 많은 경우에 기관 보육이나 조기 교육에 대해 다소 높은 동의를 보이는 특징이 있으나, 맞벌이 여부나 가구소득 등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사교육 서비스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 확대 필요성에 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으며, 서비스 이용비용이 30~50만원인 경우에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무상 보육을 위한 증세 의사,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등에서 약간 높은 동의를 보였음.
- 취학 전 한글교육 필요성에 높은 동의를 보이는 경우 사교육 서비스 혹은 개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관과 사교육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높은 동의를 보였음.
- 영유아 가구들이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높은 동의를 보이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낮은 동의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용 지원 체계의 조정은 불가피 하다고 보여짐.
-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증세 부담 의향에 대한 대국민 조사인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124~125)에서도 추가 부담 의향은 낮았으며, 특히 영유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6.8%에 그쳤음.
- 이처럼 무상 보육 등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한 높은 동의도에 비해 이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 의사가 낮은 만큼 주어진 재원 안에서 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비용 지원 체계의 모색이 필요함.
- 무엇보다 추가 증세에 대한 의향은 낮았으나 무상 보육에 대한 지지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증세가 아닌 재정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유아교육·보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시급히 요구됨.
-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강화가 요구됨.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무상 보육 등 지원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동의도가 높게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은 일·가정 양립 지원의 강화가 정책 실효성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위해서는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육 사각 지대 해소 뿐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부모권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즉 유연근무 및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의 확대, 강화가 요구됨.

- 영유아 가구의 조기교육에 대한 요구는 전반적으로는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조기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부모일수록 사교육 등의 이용 비중이 높고,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도 높은 특징이 포착됨.
 - 교육부는 초등 1~2학년의 한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유아기 한글 학습을 자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²⁾, 영유아 부모들은 조기 영어나 수학 교육에 비해 특히 한글 교육은 취학 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사교육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침.
 - 결국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비용 지원 정책의 취지도 반감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영유아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의 강화와 정책 홍보가 요구됨.
 - 한편, 영유아기 부모들의 조기 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정부의 정책과 초등기 이후 교육 과정에 대한 불안감이 투영된 것일 수 있으므로, 공교육 정상화와 강화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됨.

2) 연합뉴스(2016. 8. 1.), 내년부터 초등학생 한글교육 학교가 책임진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9/0200000000AKR20160729136200004.HTML>에서 2018년 6월 11일 인출함.

| 참고문헌 |

- 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2016).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이혜숙(2016).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경(2005).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3(6), 47~60.
- 박선욱(2008).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보육비 지출실태와 영향요인. 소비문화연구. 11(2), 197~213.
- 박선욱(2011). 보육서비스 유형선택과 비용의 결정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20(4). 831~847.
- 연합뉴스(2016. 8. 1.) 내년부터 초등학교 한글교육 학교가 책임진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9/0200000000AKR20160729136200004.HTML>에서 2018년 6월 11일 인출함.
- 이성림(2011). 영유아 자녀 가계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소비 실태. 생활과학, 14, pp.118-134.
-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III.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